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연구*

방인혁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논문요약 |

북한의 대남정책은 국가의 대외정책 일반이 그러하듯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 및 통일정책의 의도와 목표를 파악하는 기초이다.

국가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초로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의 변화를 고찰한다면, 현재의 남북한관계 구축까지의 역사는 물론이고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즉 국제환경의 변화, 남북한 상호 역관계의 변화 나아가서는 남한의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 및 이와 긴밀히 연관되는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초와 목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이념과 체제 요인, 남북한 힘의 관계, 남한의 사회민주화 진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국제환경 변화 등을 변수들로 설정하여 김일성 시대 대남인식의 변화를 민주기지론 시기, 남조선지역혁명론 시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시기로 구분한다. 이런 변화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북한 힘의 관계와 남한의 정치정세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민주화라는 변수는 긍정적 방향으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민주기지론, 남조선지역혁명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남한의 민주화,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011). 세심한 심사를 맡아 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I. 서론

북한의 대남정책은 국가의 대외정책 일반이 그러하듯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 및 통일정책의 의도와 목표를 파악하는 기초이다.¹⁾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념과 체제 측면에서 상대 국가와의 비교는 물론이고 서로간의 힘 관계, 두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환경, 각 상대 국가 내부 정세 및 행위 나아가서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 국가에 대한 선입관까지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분단국가인 남북한 사이에서는 이런 일반적 요인들에 더하여 통일의 과정에서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냉전기의 전쟁과 적대적 경쟁을 거쳐 현재의 탈냉전 시기 화해와 대결의 긴장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맺어 왔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결국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른 상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관계 변화의 방향과 폭을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냉전기의 거의 전부를 포괄하는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은 나름대로의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즉 탈냉전 이후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이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김일성 시대의 대남인식은 몇차례 변화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

국가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작용하는 상술한 다양한 요인들을 기초로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의 변화를 고찰한다면, 현재의 남북한관계 구축

-
- 1) 정영철은 남북한관계가 ‘보는 방식’과 ‘보여지는 방식’에 따른 ‘시선의 정치’였다고 본다(정영철 2012, 51). 즉 남북한은 서로를 보는 방식인 상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상대를 부정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남북한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인식은 상대에 대한 정책은 물론이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되었다고 본다.
 - 2) 김일성 시대 대남인식의 변화가 탈냉전 이후 김정일 시대의 그것에 비해 극적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변화의 계기란 북한의 대남인식 형성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가 김일성 시대에 더욱 빈번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까지의 역사는 물론이고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즉 국제환경의 변화, 남북한 상호 역관계의 변화 나아가서는 남한의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 및 이와 긴밀히 연관되는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초와 목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2절에서는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의 형성과 변화를 결정하는 환경적 차이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환경적 차이에 따라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고, 그것이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3절에서는 남북한 이념과 체제 요인, 남북한 힘의 관계, 남한의 사회민주화 진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국제환경 변화 등을 변수들로 설정하여 김일성 시대 대남인식의 형성과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요소와 변화된 요소를 살펴보고, 각각의 변수들에 따른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를 요약함으로써 바람직한 남북한관계 설정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의 환경적 차이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국제환경적 요인은 무엇보다 냉전과 탈냉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물론 1994년 사망한

3) 한 심사자의 지적처럼, '김일성 시대'라는 규정이 사회과학적 엄밀성을 갖는지는 의문이다. 황장엽의 증언처럼 북한정치사에서는 김정일로의 후계구도 구축이 진행되던 시기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공동 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정치사에서 김일성의 생전 시기는 거

김일성의 집권 시기에 탈냉전이 도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일성의 집권 시기 대부분은 국제적 냉전 시기에 걸쳐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대사가건이 북한의 대남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은 탈냉전의 환경에 긴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⁴⁾ 특히나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등에 따른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남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실행에서 능동적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은 체제유지와 경제난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미시적 변화는 있겠지만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은 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집권 시기 대부분이 냉전 시기와 겹치는 김일성 시대 북한도 남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국제환경 요인의 영향은 고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냉전 시기가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첨예한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에서 국제환경적 요인의 영향은 상당히 고정되고 제약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가 국제환경 차원에서 확연히 구분되고 이것이 각각의 대남인식의 형성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국제환경 변수가 각각의 대남인식의 변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이념과 체제의 고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에서 이념과 체제 변수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⁵⁾ 이념과 체제 차원에서 북한

의 냉전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인식의 특징적인 한 시기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 연구가 SSK 사업의 공동연구로 진행된 까닭에 정영철 교수와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로 구분하여 북한의 대남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 4) 탈냉전에 대한 북한의 초기 반응이 제국주의의 책략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내외 정책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주관적 평가와 대응과 상관없이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에 의한 탈냉전이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인식과 정책의 불가피한 환경적 구조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을 대립과 적대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탈냉전 시기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체제유지와 경제난 극복 등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상당 부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탈냉전기 대외 인식과 정책의 조정은 여전히 기존 이념과 체제의 고수를 전제하고 있고, 특히 통일의 주도권을 다투어야 하는 남한에 대해서는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함으로써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대남인식에서의 변화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⁶⁾

따라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에 변화를 초래한 변수들 가운데 남한 내부 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 남북한 상호 힘 관계의 변화 등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변수들에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는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김일성 시대 남북한은 총체적 힘의 균형⁷⁾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남한의 정치상황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반해 김정일-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남북한은 힘의 관계에서 총체적으로 남한의 우위가 지속되었고, 남한의 정치상황도 1987년 6월 민주대항쟁 이후 부침은 있지만 상당히 안정된 민주적 질서가 정착되었다. 남북한의 힘의 균형의 변화와 남한의 정치상황의 두 변수에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 5) 북한은 1992년 1월 3일 김정일의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경험과 우리당의 총로선”과 김일성 사후인 1994년 11월에 발표된 김정일의 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의 글에서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기존의 이념과 체제의 고수를 거듭 천명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에서 이념과 체제 변수는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것임을 보여 준다.
 - 6) 김정일이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평화공존이나 평화정착 문제 등은 주변국들과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정일 2005, 67). 이것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을 여전히 평화 문제에서는 제한적인 역할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 7) 이 글에서 남북한 사의의 힘 관계라는 용어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국방 등 총체적인 국력의 비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1. 남북한 힘 관계에서의 차이점

남북한 힘 관계 특히 경제력 측면에서, 김일성 시대는 북한의 우위에서 남한의 우위로 역전되는 계기가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이른 시기에 전후 복구를 거쳐 1960년대의 제1차 7개년 계획을 완수함으로써 남한에 비해 확고한 경제적 우위에 있었다. 또한 정치권력 차원에서도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 세력의 단일지배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한에서는 이승만 독재정권하에서 전후 복구를 포함한 경제건설 전반에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또한 1950년대 후반에는 미국 원조의 삭감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의 경제재건을 목표로 하는 연이은 5개년 계획들로 남한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대략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힘의 균형이 북한 우위에서 남한 우위로 역전되게 된다. 남북한 사이에서 경제력 우열관계는 곧바로 이념과 체제 측면에서 우열관계의 증표로 생각되었다. 냉전 시기 군사적 및 정치적 차원에서 이른바 남방삼각동맹과 북방삼각동맹이 대립하던 한반도 조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성과의 우위는 곧바로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⁸⁾

김일성 시대와는 달리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은 남한의 경제성장에 비교되지 못할 정도의 만성적인 경제난에 봉착했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이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초래된 것으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총체적인 힘의 관계에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북한의 대남인식은 이런 절대적 열세를 전제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달리 말하자면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에서는 경제력 우열관계의 변화에

8) 냉전 시기 한반도에서 군사적 힘의 관계는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성립되었다. 반대로 1961년 5.16쿠데타 이후 북한은 동년 7월 6일과 11일 각각 소련과 중국과 〈우호협조와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방삼각동맹이 성립했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힘의 관계는 대체로 교착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변화가 발견되는 반면,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에서는 그런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남한의 정치정세 변화에서의 차이점

북한의 대남인식의 형성과 변화에서 중요한 변수인 남한의 정치정세 변화는 김일성 시대에 보다 복잡하고 가변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에서는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독재정권이 타도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에 정치사회에서는 혁신계의 등장 등 기존 반공일변도의 이념지형에 균열이 일어났다. 그러나 단명한 혁명적 분위기는 다시 1961년 5.16쿠데타로 전복되었고, 1979년 10.26 박정희 시해사건까지 오랜 군사독재 시기를 거쳤다. 그러나 10.26사건은 본질적으로 군사독재 집단 내부의 균열에 따른 것으로, 1980년 6월 광주민중항쟁이 진압되면서 신군부에 의한 군사독재 정권은 1987년 6월 민주대항쟁 시기까지 청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한의 정치정세는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현재까지 민주화의 공고화와 심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절차적이고 정치적 민주화는 정착되었다. 따라서 김일성 시대 북한은 이러한 남한의 정치정세 변화에 따라 대남인식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했다.

반면에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은 절차적이고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남한을 상대로 하게 됨으로써, 남한정치 정세의 변화라는 변수는 북한의 대남인식의 내용과 변화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남한의 집권세력의 이념적 좌표에 따라 약간의 부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⁹⁾ 남한의 정권을 대화와 협상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⁰⁾ 물론

9) 1993~4년 이른바 제1차 북 핵위기와 특히 1994년 7월 김일성 조문파동을 계기로 북한은 김영삼 정부와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였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경한 대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부터 특히 1998~2007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이후 남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은 남한에서 반보수대연합을 통한 진보개혁의 추진과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을 강조하는 등¹⁰⁾ 남한의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일정에 개입하려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에서 남한 정부 당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즉 과거 김일성 시대와 달리 남한 정부 당국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보다 우호적인 정부가 남한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시대의 대남인식은 현재의 김정일-김정은 시대와 달리 남북한의 상호간 힘 관계의 변화와 남한의 민주화 등 남한 내부 요인 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 결과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이나 대남 및 통일 정책에서는 몇 번에 걸친 변화가 발견된다.

III.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북한의 대남인식 형성과 발전에서 이념과 체제 변수와 이와 연관성이 있는 국제환경적 변수는 상당히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김정일-김정은 시대와 달리 김일성 시대 대남인식의 내용과 변화에서 남북한 힘 관계의 변화와 남한 정치정세 변화라는 변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김일성 시대에는 특히 경제력 우열관계의 변화와 함께 남한 정치정세의 몇 차례에 걸친 계기적

10) 2011년 2월 5일자 『로동신문』, “〈론설〉 당국대화의 실현은 북남관계 개선의 선결과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은 남북한 당국 간 대화를 여전히 북남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김일성 시대 남한의 파쇼독재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치 않았던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2012), “김정일 시대의 대남 인식과 통일정책(북한연구학회 2012년 춘계학술회의 발표문)”의 2장 2절 참조.

11) 이에 대해서는, 전종호(2006), “〈론설〉 남조선에서의 반보수대연합의 실현은 절박한 과제,” 『로동신문』, 2006년 1월 19일.

변화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남인식 및 통일정책에서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위의 두 변수에 따른 김일성 시대 북한 대남인식의 변화를 민주기지론, 3대혁명역량강화론에 의거한 남조선지역혁명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론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단계 구분은 남북한 사이의 힘 관계의 변화와 남한의 정치정세 변화에 부합되고, 또한 각 단계마다 북한의 대남인식과 통일정책에서의 변화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1. 민주기지론 시기 북한의 대남인식

김일성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립대회 보고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최초로 민주기지노선을 제안했다.¹²⁾ 이 보고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진주로 혁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북한과 미군의 주둔으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이 활개치는 남한은 전혀 다른 정세에 놓이게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는 통일적당을 창건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통일적당을 창건할수 있는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12)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립했다. 북조선분국은 서울의 조선공산당 당중앙의 권위가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국내파의 반발을 고려하여 국내파 김용범과 오기섭을 각각 제1비서와 제2비서로 임명했다. 그러나 『김일성 저작집』 1권에 수록되어 있는 이 글의 부제에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로 창립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중반 박헌영을 비롯한 국내파 숙청 이후 수정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북한이 조선로동당의 창건일을 1945년 10월 10일로 지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사실상 현재 조선로동당의 전신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김일성 보고에서 제안된 민주기지론은 원래의 의도와 다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민주기지론의 최초 제안문건을 김일성의 이 보고로 삼는다.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우리는 북조선에 조성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야만 또한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고 건국사업을 잘하여나갈수 있으며 북조선을 조선 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 1979, 308-9).

김일성은 이 보고에서 당의 정치노선을 논하면서, 당의 중요 과업으로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 형성, 모든 반동분자의 청산, 지방의 인민위원회 조직과 민주주의적 개혁 및 경제 부흥을 통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의 기본토대 구축, 공산당의 확대 강화와 사회단체 사업의 강화를 제시했다(같은 글, 320-7). 결론적으로 김일성은 “우리는 이와 같은 당면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함으로써 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을 다그치며 북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주의적기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같은 글, 327)”라고 선언했다.

김일성의 이 보고에서 최초로 제기된 민주기지론은 북한의 『정치사전』에 규정된 대로 단적으로 말해 “혁명하는 나라의 한지역에서 승리한 혁명을 공고히 하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책원지(사회과학출판사 1973, 1235)”를 의미한다. 이처럼 민주기지론은 해방 이후 남북한 사이의 달리 조성된 혁명정세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북한의 당과 정권의 건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가겠다는 것이었다.

민주기지론은 미국의 식민지 예측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한이라는 대남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10월 2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함경남도 열성자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모든 힘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하여”에서도 이런 대남인식의 기본틀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쟁취한 승리 가운데 첫 번째로 “조국의 통일기지며 혁명의 근거지인 공화국북반부를 사수(김일성 1980, 101)”한 것을 내세우며 다음과 같은 대남인식을 보여 주었다.¹³⁾

13) 한국전쟁은 다름아닌 이런 북한의 민주기지 노선 실행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조국통일위업은 실현되지 못한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등지를 틀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여전히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여야 합니다(같은 글, 108).

이처럼 민주기지론은 남한의 이승만 정부를 미국의 식민통치의 “괴뢰도당”으로 규정하고, 남한의 인민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대남인식에 기초했다. 민주기지론의 이런 대남인식을 뒷받침했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빠른 전후복구와 이후 5개년계획의 성공에 따른 남한에 대한 경제력 우위와 함께 전쟁으로 더욱 강화된 남한의 이승만 독재체제에 따른 남한 정치사회의 난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김일성 연설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북한이 제의하는 일체의 평화적 통일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기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기지를 강화하면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괴뢰도당이 함부로 공화국북반부를 먹겠다고 덤벼들지 못할것입니다. 민주기지를 강화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남북간의 차이를 하늘과 땅 같이 만든다면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고 우리를 적극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같은 글, 109).

요컨대 민주기지론에 따르면, 북한의 민주기지 강화를 통해 미국과 남한 “괴뢰도당”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민주기지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남한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쟁이 최초에는 내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북침설과 남침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이른바 민주개혁의 성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북한이 민주기지 노선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목표로 한국전쟁을 주도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종석은 민주기지론에 대한 이해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인식이 한국전쟁을 통해 민주기지 개념을 이해하려는 경향에서 나온 오류로 “민주기지론은 통일을 향한 적극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명건설을 통일의 관점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한 매개개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이종석 1995, 366)”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종석의 이런 주장은 한국전쟁을 민주기지론의 필연적 산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분단 초기 전한반도적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통일과제가 남북한 모두에게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이종석도 민주기지론은 장기적 발상으로 평화적 전도와 물리적 전도가 포괄되지만, “다만 평화적 전도의 길은 쉽게 정책화시킬 수 있으나 전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길은 압도적 역량의 우세와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이라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책, 367)”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전 시기 북한에서 반복하여 주장된 민주기지론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건설의 촉구와 남한에 대비한 압도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 나아가서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여론의 환기 등을 강조하는 점에서, 민주기지론을 이종석의 주장처럼 당면 북한의 혁명건설을 통일로 정당화하기 위한 매개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⁴⁾

요약하자면 1945~1960년에 걸친 북한의 민주기지론은 해방 이후 남북한에 조성된 정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에서 혁명과 건설의 진전을 통해 민주기지를 강화하여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전한반도 범위로 혁명의 확산과 북한의 민주기지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런 민주기지론의 바탕에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우세한 역관계에 대한 자신과 이승만 독재 치하의 남한의 억압적 정치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인민의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강도를 오관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은 민주기지론의 필

14) 남조선지역혁명론의 의의에 대한 다음 절의 논의에서 반복되었지만, 민주기지론에 대한 이종석의 인식의 한계는 196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이 민주기지론에서 남조선혁명론으로 바뀌었다는 견해를 오류라고 보는 그의 주장에 대한 반비판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연적 산물은 아니지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하나였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 남조선지역혁명론 시기 북한의 대남인식

1960년 4.19혁명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단명한 제2공화국 시기 남한에서의 정치정세의 전개 및 이에 대응하는 1961년 5.16쿠데타의 발발 등 1960년대 초반 남한은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에서의 변화는 1961년 9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김일성은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남한에서의 4.19혁명에서 5.16쿠데타에 이르는 과정을 요약한 다음, 다음과 같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과업”을 제시했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당을 가져야 합니다. …… 혁명적당이 없었고 뚜렷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널리 참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4월인민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앞잡이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혁명적당의 령도가 없었으며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이 각성되지 못하였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군부상층의 파썸분자들에 의한 권력탈취를 막지 못하였으며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반대하여 힘있는 반격을 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81, 129-30).

남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독자적인 혁명적 당을 건설할 것과 그것의 합법적 지위를 쟁취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민주기지론에는

없던 조항으로 이른바 남조선지역혁명론으로의 변화의 핵심적 내용이다. 남한에서 독자적인 혁명적 당 건설에 대해 1964년 2월 27일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결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는 “북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김일성 1982, 141)” 라고 전제하며 다음과 같이 보다 상세히 제시되었다.

그러면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먼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혁명의 주력군이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기본계급과 그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합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자, 농민이 동원되어야만 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글, 141).

이 글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 혁명역량, 즉 북조선의 혁명역량, 남조선의 혁명역량 및 국제적 혁명역량이 필요하다는 3대혁명역량론(같은 글, 135)이 함께 제기되었다. 즉 기존의 민주기지론의 내용인 북한혁명역량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남한에서의 독자적인 전위적 당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한혁명역량 및 국제혁명역량이 전한반도 혁명 성공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1961년 9월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대남정책의 기본방향이 과연 민주기지론에서 남조선지역혁명론으로 변화되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 이종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1960년대 북한이 ‘남조선혁명론’을 내세우며 실천에 옮기려 했던 ‘민주기지론’은 전쟁을 수반하지 않은(이런 의미에서 평화적인)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이라는 전도(前途)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이 ‘민주기지론’에서 ‘지역혁명론’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견해는 북한의 ‘남조선혁명역량 강화’에 대한 강조를 확대해석한 데서 온 오류라고 할 수 있다(이종석 1995, 367-8).

이종석에 따르면, 민주기지론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남는 한 포기할 수 없는 당위적 명제이고, 다만 실천능력에서의 부재로 인해 지역혁명론으로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같은 책, 368). 그러나 이종석이 간과한 것은 북한이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당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일국 일당 원칙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국 일당의 원칙은 1920년 7월 24일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서 결의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 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테제”에 명기되었다. 즉 테제에서는 “각각의 나라에 단 하나의 통일적인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편집부 편역 1988, 171)”고 명시했다. 이런 코민테른의 테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혁명적 전위당의 영도적 역할을 감안하면 남한에 독자적인 전위적 혁명당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남조선지역혁명론은 기존의 민주기지론과 질적 차이를 인정해야만 한다.¹⁵⁾

물론 북한에서 민주기지론을 최초로 제기했던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의 북조선분국 창립대회 보고에서 당시 남북한에 조성된 정세의 차이로 북한지역의 당조직 건설을 정당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북조선분국은 남북한이 각각 미군과 소련군 점령이라는 조건의 차이에서 장래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적 당 건설을 위한 과도적 조치로 주장된 것이었다. 또한 민주기지론은 혁명이 먼저 성공한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확산해간다는 기초에 입각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남북한의 통일적 혁명적 전위당 건설의 한 과정으로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남조선지역혁명론은 민주기지론과 달리 한국전쟁으로 남한에서 전위당이 와해된 조건에서 당시 남한의 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독자적 전위당 건설을 제안했던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국 일당 원칙에 따르면, 별도의 남한의 혁명적 전위당이 필요하

15) 1960년대 초 동서 냉전이 첨예했던 시기 국제공산주의 진영에서 소련의 위상은 확고했다. 뿐만 아니라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들 사이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소련이 코민테른을 해체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국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과거 코민테른의 결정들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이 남한의 정세변화와 남북한의 혁명조건의 변화를 이유로 일국일당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단순히 전술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구갑우가 북한 연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리엔탈리즘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열린 보편주의’ 시각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점은 이 점과 관련하여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구갑우 2005, 267).

다는 남조선지역혁명론은 남북한의 사회성격이 이미 달라졌고, 그에 따라 전위당이 추구해야 할 당면의 혁명적 과업도 다르다는 것을 북한 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6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남한에서의 혁명적 전위당 결성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남한에서 이에 동조하는 통일혁명당 창당 준비세력이 활동을 시작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혁명당 창당 사업은 1968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지도부가 검거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북한은 북한지역에 통일혁명당을 조직하여 이것이 마치 남한에 존재하는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남한에서의 혁명적 전위당 결성을 골자로 하는 남조선지역혁명론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혁명당의 이런 실패가 곧바로 민주기지론과 남조선지역혁명론의 차이를 부정하는 근거로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민주기지론은 혁명적 전위당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를 통해 남한인민을 식민예속과 독재통치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인 반면, 남조선지역혁명론은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4기 8차 전원회의에 김일성이 “북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김일성 1982, 141)”고 선언한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민주기지론에서는 조선로동당이 한국전쟁 이후 혁명적 당이 부재한 남한으로 혁명을 확대하는 책임을 자임한다면, 남조선지역혁명론은 남한에 혁명적 전위당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기지론과 남조선지역혁명론의 차이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이후인 1975년 조선로동당 창건 3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허종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북과 남의 상반되는 이 두 발전추세와 계급관계는 필연적으로 한 나라안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혁명과업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통일적인 하나의 조선혁명이 조성된 정세의 주객관적조건에 맞게 북과 남의 두 지역에서 각기 자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수 없게 한 객관적근거로 되었다(허종호 1975, 19).

남조선혁명은 조선혁명의 기지로서의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유기적인 연관밑에 진행되면서 그의 믿음직한 후원을 받게 되며 북반부혁명기지의 강력한 지원밑에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과소통치를 뒤집어엎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우리 민족의 지상의 혁명과업인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복무한다(같은 책, 30-1).

이처럼 사회주의의 일국 일당 원칙과 민주기지와 남조선지역혁명론의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의 독자적인 혁명적 전위당 결성을 골자로 하는 남조선지역혁명론이 제기된 주객관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허종호의 앞 부분 인용에서처럼 북한은 남조선지역혁명론의 객관적 근거는 남북한에 각각 조성된 발전추세와 계급관계의 차이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힘 관계에서 북한은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체적 배경은 1960년 4.19혁명에서 1961년 5.16쿠데타에 이르는 남한 내부 정치정세의 변화임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대남정책의 틀을 남조선지역혁명론으로 변화시킨 1961년 9월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남한정세가 민주주의 세력의 성장으로 혁명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4.19혁명에서 5.16쿠데타에 이르는 남한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지난해 봄에 미제국주의식민지제도밑에서 부패와 학정을 더는 참을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새 정치와 새생활을 요구하여 영웅적항쟁에 일떠서 리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것은 남조선인민들이 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였으며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었습니다.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었습니다. ……

장면 <<정권>>의 마지막시기에 남조선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는 매우 날카롭게 되었습니다. 인민생활은 참을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 갔으며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 막다른골목에 이른 미제국주의 자들과 남조선반동은 파국에 놓인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여보려고 파쑈적군사독

재를 세우는 모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김일성 1981, 127).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은 남한에서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남한 민중이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할 만큼 성장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1961년 5.16쿠데타는 바로 성장한 남한 민중의 저항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지배세력의 파쇼적 대응으로 인식했다. 남한민중의 저항과 역량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민주기지론 시기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한 민중의 미국의 식민예속과 국내의 대리정권의 독재에 신음하는 존재로 북한의 민주기지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남한 민중이 혁명적 전위당을 갖지 못함으로써 결국 5.16쿠데타에 의한 군사파쇼체제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같은 글, 129) 남한의 혁명적 전위당 결성을 골자로 하는 남조선지역혁명론의 제기한 것이다.

남조선지역혁명론은 1964년 2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3대혁명역량론(김일성 1981, 135)의 한 구성부분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이른바 민주기지론 시기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로 북한의 역량이 남함보다 월등히 우세하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3대혁명역량론에서 북한은 남한민중의 남조선혁명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존재로 위치지워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961년 9월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를 계기로 민주기지론에서 남조선지역혁명론으로 변화된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민주기지론 시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신하면서도, 1960년 4.19혁명으로 변화된 남한 정치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조선지역혁명론은 통일혁명당 창당의 실패라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이론적 측면에서도 혁명과정에서 북한의 후원과 지원 이후 혁명의 종결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남북한이 결합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이 두 문제점에 관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혁명적 전위당에 의한 혁명 아래 단계의 남한

민주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완성태로서의 연방제 방안의 제시였다.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론 시기 북한의 대남인식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일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김일성 1987, 347).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 원칙은 민주기지론이나 남조선 지역혁명론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북한의 대남인식과 통일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북한을 혁명의 근거지, 책원지로 삼아 전국적 범위로 혁명의 확산을 목적으로 했던 민주기지론은 물론이고 남한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전위당을 통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수행을 주장했던 남조선지역혁명론도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의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1960년 4.19혁명 직후였던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 15주년 기념 연설에서 최초로 제안했던 연방제 제안이나 1973년 6월 23일 제안했던 고려연방제 제안에서도 연방제는 사상과 제도의 궁극적 통일로 가는 과도태로서의 연방제였다. 그러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은 다음과 같이 연방이 통일의 완성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같은 글, 347).

사상과 제도상의 용인을 전제하면서, 연방제를 통일의 완성태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해, 고병철은 사실상의 제도적 통일이며 “국내외 선전용으로 내놓은 정치적 도구의 성격(고병철, 51)”의 측면을 가졌다고 비판한다. 즉 사상과 제도의 용인을 주장하면서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대외정책의 공동 추구 및 최고민족연방회와 연방상설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연방정부 수립 주장도 사실상 제도적 통일을 표방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남한당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함에도 당시 전두환 정부의 타도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전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고병철은 다만 선전용에 불과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은 1991년 1월 1일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실용주의적 조정을 받게 됨으로써 통일방안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같은 글, 51).

그러나 고병철의 이런 주장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던 김일성의 보고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기존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초들이었던 민주기론과 특히 남조선지역혁명론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첫째, 김일성은 해방 후 남북한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에,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같은 글, 346)”라고 전제했다. 즉 남북한의 기존 제도와 사상을 용인하지 않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했다.

둘째, 당시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고 전복을 선동한 것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남측 지역 정부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한민중을 유혈적으로 진압한 것에 대한 비판의 의미이다. 이는 김일성이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사태와 남조선이민들이 겪고있는 재난(같은 글, 342)”의 장본인인 미국의 앞잡이인 전두환 정부와는 연방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이다. 통일방안은 현실성과 함께 규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기지론과 남조선지역혁명론이 북한의 이념과 체제는 물론이고 혁명과 건설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전제로 하여, 남한으로의 혁명의 확대 혹은 후원·지원을 말하는 데 반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는 이런 북한의 자신감이나 우월감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병철의 주장과 달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기존의 민주기지론과 남조선지역혁명론과 구분되는 새로운 북한의 대남정책 및 통일정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대남인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에서의 변화는 다음의 몇 가지 변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남북한의 경제력 우열관계가 역전된 것이다.¹⁶⁾ 이념과 체제의 대립 내지는 교착을 전제로 하는 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힘의 우열관계나 이념과 체제의 우열관계의 중요한 지표는 경제적 성과였다. 따라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의 역전은 남북한 힘의 관계에서 북한의 자신감 상실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는 기존의 민주기지론이나 남조선지역혁명론에서 강하게 전제되었던 북한의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남조선지역혁명론의 핵심이었던 남한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위당 건설, 즉 통일혁명당 창당에 실패한 점이다. 북한은 북한지역에 존재했던 통일혁명당을 남한에 존재하는 전위당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런 주장의 허구성은 누구보다도 북한 자신이 잘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남조선지역혁명론에 기초한 통일의실현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 인식하고, 새로운 대남 및 통일 정책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남한의 정치정세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평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남한 정치정세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높은 매국노, <<유신>>독재의 원흉을 파멸시

16) 이 시기 남북한 경제력 역전에 대해서는, 정영철의 앞의 논문 제2장 1절 참조.

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민민들의 영웅적봉기는 남조선의 파쇼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쇼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쇼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있습니다. ……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었습니다(같은 글, 340-1).

즉 북한은 남한 민중의 투쟁에 의해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과 남한의 군사파쇼의 탄압으로 참혹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김일성은 남한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군사파쇼 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며,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군사파쇼 《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343)”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자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을 위한 선결조건을 남한에서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한 힘의 관계에서 북한의 열세로의 전환을 계기로 남한에서 혁명적 전위당에 의한 혁명 성공의 불투명성, 그리고 남한 민중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파쇼가 지배하고 있는 조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60년 4.19혁명 직후 남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위당 창당을 주장했던 남조선지역혁명론이 실패한 조건에서 이후 지속적인 민중의 투쟁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되었지만 여전히 군사파쇼의 통치가 지속되는 남한의 정치적 조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남한의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 질서의 구축이 절박한 과제로 부상하는 것과 함께, 힘의 관계에서 열세에 처한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민주정부와의 연방을 통일의 완성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초반 탈냉전과 함께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총체적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을 통해 정치적 및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행한 남한과의 타협과 공존 나아가서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통일방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월 1일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제안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바로 이런 필요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의 기본축은 여전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시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IV. 결론

한 국가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다양하다. 국제환경 변수, 상호 힘 관계 변수, 상대의 정세와 행동 변수에 특히 냉전기에는 이념과 체제 변수까지 작용하기 마련이다. 남북한의 상대에 대한 인식과 정책 형성에서도 이런 변수들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형성에서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정도에 있어 특징적 양상을 보여 주었다.

냉전기는 물론이고 탈냉전기에도 북한은 기존 이념과 체제의 고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념과 체제 변수는 북한의 대남인식 형성에는 작용하지만 그것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냉전기인 김일성 시대 국제환경은 남방삼각동맹과 북방삼각동맹의 대치 속에서 대남인식과 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냉전 시기의 국제상황은 그만큼 경직성과 불변성을 가지기 때문이었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의 기본축은 민주기지론에서 남조선지역혁명론으로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런 북한 대남인식의 기본축을 변화시킨 요인 가운데 이념과 체제 변수와 국제환경 변수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면, 남북한 힘 관계의 변화와 남한의 정치정세의 변화라는 두 변수의 역할에 따른 것이었다.

남북한 힘의 관계라는 변수 측면에서 민주기지론과 남조선지역혁명론은 북한의 힘의 우위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었다. 반면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그 자체가 1970년대 중후반을 획기로 하는 남북한 힘의 우위의 역전과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민주기지론, 남조선지역혁명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모두 남한의 민중투쟁과 지배세력의 대결에 따른 정치정세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수는 다름아닌 남한의 정치정세, 즉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것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민주기지론에서 남조선지역혁명론으로의 변화는 남한의 1960년 4.19혁명에 의한 이승만 독재정권의 붕괴가 계기로 되었다. 민주기지론은 혁명에 먼저 성공한 책원지로서 북한의 역량으로 전한반도 차원으로 혁명을 확대하는 전략이었다. 반면 남조선지역혁명론은 4.19혁명으로 조성된 민중적 정치공간이 5.16쿠데타로 좌절된 경험에서 남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위당 구축을 통해 남한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때 북한의 혁명역량은 남한의 혁명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3대혁명역량론의 문제의식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1960~70년대 남한의 정치정세는 통일혁명당 창당 실패부터 박정희 정권 시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남북한 경제력 우열관계의 변화 등 남조선지역혁명론의 구상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붕괴되고 남한의 민주역량이 일시 강화되기도 했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로 민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남한 정치정세의 진행을 본 북한은 남한에 대한 경제적 열세 등을 인식하면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 용인을 전제로 하는 통일의 완성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북한은 남조선지역혁명론을 제기했던 시기의 자신감은 실종된 상태로 남한에서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남북한 화해와 대화 및 나아가서는 연방제 수립의 전제로 제시했다. 요컨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조선지역혁명론보다 통일의 상대인 남한 정부의 성격을 보다 낮은 단계로 설정한 것이었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형성과 변화에는 남북한 힘 관계와 남한의 정치정세 변화라는 변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에 대한 경제력 열세로 드러나는 힘 관계에서 열세에 처할 수록 혁명보다는 공존으로 대남정책의 목표를 조정할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사회의 민주화의 가능성과 진전에 따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인하는 통일방안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으로 남한에서 적어도 절차적인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1991년 1월 1일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본틀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동일한 점에서 탈냉전 이후 김정일의 대남인식의 기본축도 여전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임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김정일-김정은 시대 탈냉전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됨으로써 대남 힘의 열세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조건에서 급격한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탈냉전 이후 남북한 힘 관계에서 남한의 우위가 불변하다면, 남한의 민주화의 공고화와 심화는 결국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 및 통일 정책을 보다 공존적이고 타협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의 민주화 진전은 결국 북한을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이며 타협적인 남북한관계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물론 북한이 체제와 국가의 유지를 위해 대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한다면, 이념과 체제 변수와 국제환경 변수가 북한의 대남인식의 내용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 기존 이념과 체제의 고수를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의 기본틀에도 이런 실천적 함의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병철. 2005.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 맥락.”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위음. 『남북한 관계론』. 파주: 한울.
- 구갑우. 2005. “북한 연구의 ‘국제 정치’: 오리엔탈리즘 비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위음. 『북한 연구의 성찰』. 파주: 한울.
- 김일성. 1979.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에서 한 보고(1945.10.10).” 『김일성 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0. “모든 힘을 민주기강강화를 위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합경남도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1953.10.20).” 『김일성 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1.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9.11).” 『김일성 저작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1964.2.27).” 『김일성 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0.10.10).” 『김일성 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2005.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2000.6.30).”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이종석. 1995.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 정영철. 2012. “김정일 시대의 대남 인식과 통일정책”(북한연구학회 2012년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 _____. 2012. “남북 관계와 바라봄의 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서울: 논형.
- 편집부 편역. 1988. 『코민테른과 통일전선; 코민테른 주요 문건집』. 서울: 백의.
- 허종호.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신문 자료〉

- 『노동신문』. 2011. “〈론설〉 당국대화의 실현은 북남관계 개선의 선결과제.” 2011년 2월 5일자.

전종호. 2006. “〈론설〉 남조선에서 반보수대연합의 실현은 절박한 과제.” 『노동신문』, 2006년 1월 19일자.

| | | |
|-----------------|-----------------|-------------------|
| 투고일: 2012.08.12 | 심사일: 2012.09.30 | 게재확정일: 2012.10.04 |
|-----------------|-----------------|-------------------|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South Korea in the Kim Il Sung Era

Bang, In Hyuk | Sogang University

The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s like all the nations' foreign policies has based on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South Korea. Thus to understand the cognition and it's changes of the North Korea toward South Korea is the foundation in order to apprehend the goal and intention of the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South Korea in the Kim Il Sung era enables to appraise the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as well as the histor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 constructed at present. Because it makes possible to understand not only the present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but also the basis and goal of th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losely connected with it based on the grasping the North Korean cognition and action of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wer relation and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hanges.

This paper divides the Period division of Changes of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South Korea in the Kim Il Sung era into respectively those of the democratic base, the South Korean local revolution and the forming plan of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factor of the ideology and regime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wer relation,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the advance of South Korean social democracy and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changes of south and North Korean power relation and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Korea have been confirmed as the most two important causes of it's changes. Therefore the variable of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has been confirmed as the cause that could conduce to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s cognition and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a positive direction.

Key Words | the line of democratic base, the line of South Korean local revolution, the forming plan of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e North Korea's cognition and policy toward South Korea